220㎜ 물폭탄 광주·전남 침수·붕괴 속출

20개 시·군 논 2225ha 잠기고 저지대 비닐하우스 잇단 피해
재개발 현장 배수관 공사 마무리 안돼 주택·상가 17채 침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최고 220㎜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침수·붕괴 피해가 속출했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광주에는 174.5㎜의 비가 내렸고 전남에는 평균 136.7㎜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구례 피아골이 223.5㎜로 가장 많았고 담양이 183.8㎜, 함평 169.3㎜, 구례 167.8㎜ 순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도 잇따랐다.

10년 넘게 빗소리만 들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농민은 또 하우스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저지대에서 농사짓는 게 죄"라고 한탄했다.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배수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 주민들도 "재개발 공사로 인근 상인들만 애먼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저지대에서 농사짓는 게 죄죠"=광주시 남구 구소동 일대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김모(50)씨는 무릎까지 잠긴 비닐하우스를 살펴보며 허탈해했다.

김씨는 "이 일대가 저지대라 비가 많이 내리기라도 하면 툭하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그나마 올해는 작물을 심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구가 내년에는 배수로 확장공사를 한다니, 올해까지만 양수기로 버티면 될 것같다"고 했다. 구소동 일대 저지대는 매년 비 피해가 끊이질 않는 상습침수 지역. 농림부는 이제야 구소동 일대와 광산구 연산동 152ha를 지원 대상지로 선정, 2024년까지 배수로 개선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지역 농민들도 농경지 피해로 한숨짓고 있다.

20개 시·군에서 물에 잠긴 논만 2225ha(2225만㎡)에 달했다. 고흥 566ha, 해남 511ha, 무안 334ha, 영암 211ha, 신안 123ha, 나주 98ha,함평 94ha 등의 순으로 침수 피해가 컸다.

밭작물도 물에 잠겼다. 나주에서는 고구마, 고추 등을 심어놓은 밭 6ha가 물에 잠겨 쓸모 없게 됐고 순천에서는 고추밭 0.3ha, 담양에서는 콩밭 0.3ha 등이 침수됐다.

79개동의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도 잇따라 담양 2ha(멜론·토마토)·해남 1.7ha(밤호박), 장성 1.4ha(오이·토마토)·순천 1.4ha(오이·고추), 광양 1.2ha(토마토)·무안 0.5ha(옥수수) 등이 물에 잠겨 과일 수확도 포기해야할 형편이다.

전남도는 침수피해를 본 주택과 논 등에 양수기를 투입해 물빼기 작업에 나서는 한편, 이후 예보된 장맛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수로 등 유수 통로 확보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재개발한다더니 배수로는 그대로?=광주시 북구 중흥 3동 재개발 현장 주민들은 재개발 공사 때문에 느닷없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일대에서 이뤄진 1556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 17개동(지하 2층·지상 25층)을 짓는 재개발 공사가 미처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인근 주택 13곳과 상점 4곳 등 17곳이 이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양수기를 동원, 주택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냈지만 새벽 내내 내린 비에 양수기가 고장나면서 침수 피해를 막지 못했다. 주민들은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아파트 건설과 함께 진행중인 배수로 등 시설 개선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인재'라며 구청측에 대책을 요구했다.

북구 관계자는 "재개발조합측에 침수 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에서도 집중 호우로 인한 주택 붕괴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영광군 법성면에서는 돌담 3m가 집중호우에 무너졌고 무안군 삼향면에서는 토사 5m가 유실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날 교통사고 등을 우려해 도심 지하차도·교량하부도로 등 7개 구간에 대한 교통을 일시 통제하는 등 조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와 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2교를 지나는 광주천이 불어난 물로 마치 강가를 연상케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사 과정 통행 방해·소음 피해 유발 건설사
법원 "식당 주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통행 방해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식당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건설사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공사 기간 발생한 식당 영업 이익 감소에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건설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통행 방해와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고지낼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식당 맞은편에서 진행된 B건설사의 행복주택 건설공사와 식당 옆에서 이뤄진 C종합건설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행복주택 건설 공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오피스텔 공사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됐는데, A씨는 이 기간 발생한 통행 방해와 소음 피해로 입은 영업이익 손해(9700여만원)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1500만원)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건설 과정에서 벌크 트레일러의 식당 앞 도로 무단 점용으로 발부된 자치단체의 계고서, 과태료 처분 등을 들어 '통행방해가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경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넘어선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반영, '수인한도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다'고 봤다.

다만, 행복주택 건설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과 진동, 분진이 발생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피스텔 건설로 인한 통행방해, 진동·분진 피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같은 점을 들어 통행 방해 행위와 소음으로 받은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건설사들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B건설사에 대해서는 300만원, C건설사는 7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달 주문으로 인한 매출이 방문 고객 매출보다 비중이 많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상 공사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단정할 수 없다며 식당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건설사들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일 전두환 재판…코로나19에 방청석 33석으로 줄여

전두환(89)씨의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전씨 측은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을 또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5·18 기간 헬기사격 여부를 신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

5·18 당시 광주에 출동한 헬기부대에 소속된 영관급 군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배정석(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을 기존 65석에서 33석으로 줄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스프링클러 설치 미루는 병원들…대형화재 위험 크다

화재 취약한 광주·전남 병원

의무설치 대상 339곳 중 251곳
유예 기간 남았다며 '미적미적'

광주·전남지역 병·의원 251곳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기간이 남았다며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환자 불편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를 미루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소방시설법(2019년)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병원은 광주 207곳, 전남 132곳 등 모두 339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바닥면적 600㎡' 이상 병원으로, 법 개정 당시 신설병원이 아니라 오는 2022년까지 8월까지 설치하도록 유예 혜택을 받았다.

이러다보니 이들 병원 중 현재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병원은 광주 48곳(23.1%), 전남 40곳(30.3%)에 불과하다.

광주시 북구 A병원의 경우 지하2층 지상10층(152개 병상)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지만 층마다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볼 수 없었다. 바뀐 소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고흥 윤호21병원 화재 당시, 비상구가 유독가스의 굴뚝 역할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병원 비상구(2개)가 제대로 대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설치가 시급해보였다.

서구 B병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건물 전체 면적이 5035.74㎡에 이르고 200개가 넘는 병상에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스프링클러는 보이지 않았다.

소방설비업계측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330㎡ 기준으로 3000여만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5000㎡인 병원이라면 4억5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입원 환자들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면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병원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기엔 부담이 크다"면서 "과거에 지어진 병원 상당수는 석면을 내장재로 사용해 석면해체를 위한 전문업체 고용까지 책임지게 되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소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점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유예기간 전 병원들의 조속한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자가격리 두차례 위반 20대 해외 입국자 징역형 선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20대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6시40분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5월 13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방역당국 조치를 어기고 다음날까지 인천·서울 다중이용시설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당국의 자가격리위 경고를 받고도 재차 격리기간 중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격리통지를 받고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음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